

# 곰팡이 피고 오물 얼룩...광주 5·18 시설 곳곳 방치

5·18기념공원내 추모승화공간 습기로 천장·바닥 곰팡이 잔뜩 유공자 명패는 얼룩에 낙서까지

5·18역사공원 옛 보안부대 건물 천장·유리창 깨지고 쓰레기 가득 43주년 앞뒀는데 관리상태 부실



5·18역사공원 입구의 옛 505보안부대 위병소 건물이 창문이 깨진 채 방치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 곳곳의 5·18 관련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방문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은 습기 때문에 천장·바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이 곳은 5·18기념공원 내 지하에 마련된 공간으로, 5·18 유공자 4296명의 명패가 보관돼 있다. 지난 3월 31일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사죄를 위해 광주를 찾았을 때 들른 곳으로 최근 추모객들이 몰리고 있기도 하다.

유공자 명패가 있는 광장 쪽 천장은 페인트를 덧칠해 곰팡이를 가렸지만, 광장 양 측면에 있는 나선형 복도 쪽 천장은 여전히 곰팡이가 덕지덕지 피어난 상태였다.

이 곳은 지하공간이라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차 곰팡이에 특히 취약한데, 정작 관리주체인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일 최대 제습량 80ℓ 짜리 제습기 두

대를 설치한 것 외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대의 제습기로는 3310㎡ 추모승화공간에 차는 습기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에도 천장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빈축을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광장 쪽 천장에 페인트칠을 해 곰팡이를 가리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공자 명패 또한 관리 상태가 부실했는데, 일부 명패가 오물로 얼룩지거나 낙서까지 돼 있는 상태

인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유공자 이용주씨의 명패는 검은 얼룩이 묻어 이름이 잘 보이지 않았고, 검은 오물이 흘러내려 밑에 있는 이용진씨, 이용찬씨 등 명패까지 오염된 상태였다. 김경환씨의 명패 인근에는 하얀 물때가 얼룩덜룩 남아 있었고, 김명선씨의 명패는 이름 가운데 '명' 부분에 검은 잉크로 덧칠한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모승화공간이 지하에 들어선 이상 제습기를 가동하는 것 말고는 습기를 해결



5·18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에 있는 유공자 명패가 검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다.

할 방법이 없다"며 "유공자 명패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일부 명패에 묻은 오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완공한 광주시 서구 삼촌동 5·18역사공원도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천

장구 유리창 등이 깨지고 부서진 채 을씨년스럽게 남아있는 옛 505보안부대 건물은 4년 넘게 손도 못 대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찾아간 505보안부대 건물은 원형보존은 커녕 내부에 쓰레기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었다. 위병소 건물은 깨진 유리창과 녹슨 철조망 등이 고스란히 외부로 노출돼 있는데다 내부에는 빈 페트병, 티슈, 컵홀더 등 쓰레기가 가득했다. 나무반, 본관, 면회실 등 다른 건물들도 공사 자재나 나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벽돌과 기와 등이 떨어져나와 위태로운 상태였다.

이곳은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이들 건물을 원형보존 및 역사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후로 줄곧 방치돼 왔다.

더구나 역사체험공간 설계 도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적지를 일부 훼손해서라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일정의 기약없이 미뤄졌다.

또 광주시는 흥남순 가옥(총 사업비 10억원), 적십자병원(175억원) 등 리모델링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느라 505보안부대 공사 예산 56억원을 확보하기 힘들어 공사가 더욱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05보안부대 건물은 CCTV와 시설경비업체를 통해 건물 출입을 막고 있어 안전상 큰 문제는 없다"며 "BF인증 내용을 포함해 실시 설계부터 다시 짜야 하고 추가 예산도 필요해 지금은 착공 시점조차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민원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중지 1년 가까이 방치한 강진군 행정은 위법

### 광주지법 행정1부 판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중지시키고 1년 가까이 방치한 강진군의 행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인인 A사가 강진군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21년 6월께 강진군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5개 업체와 태양광발전 설비 일괄 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같은 해 9월 13일 강진군에 "A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무단 침범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3일 뒤인 2021년 9월 16일 강진군은 민원을 이

유로 A사에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원인행위 소멸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 철회를 강진군에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진군은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사재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마을 주민과의 소통 등 대책 마련만 요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소멸했다"면서 "강진군은 주민들이 A사의 적극적인 대화 시도와 합의금까지 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재개 조건을 민원해결이 아닌 소통 등의 대책 마련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스토킹 피해자 신고 댄 여성긴급전화로 연계

### 하반기부터 보호서비스

전남지역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번 달부터 임시숙소와 임대주택에서 개별 거주가 가능하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계돼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1일 국정과제인 '5대 폭력(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임시숙소와 임대주택에서 개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긴급주거지원은 전남(여수 6호), 부산, 충남, 경남에서 시행되고 임대주택 지원은 전남(여수 4호), 부산, 대전, 강원에서 실시된다.

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침입 등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주거시설 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도록 했다.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300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 허위 기자회견 전직 목사 징역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주지역 목회자 300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2월 20일 기도 대회 중 기자회견 내용이 가짜라고 방송한 유튜브를 '빨갱이 대장·새끼'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의힘 당원인 A씨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윤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00명이 지지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선거에 임박해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경찰청 보험사기 전담팀 설치...두달간 특별단속

광주·전남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이 설치돼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최초로 1조원을 넘는 등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를 중점으로 단속한다.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손보험 사기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싸고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보험 사기, 일부러 불을 내는 화재보험 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공영보험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문의. 010-3605-5000**